

정책제언 I

기업들의 출산장려책, 세제 혜택 등 강구해야

부영그룹이 '1억 원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업들도 다양한 출산장려금·육아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기업들의 각종 출산장려금은 직원 출산 장려뿐만 아니라 우수 인력을 계속 유치하려는 기업의 중요 경쟁력 확보 수단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횡성 서울에프엔비는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첫째 임신 및 출산 시 태아검진비 30만 원, 출산지원비 100만 원 등 총 130만 원의 축하금을 제공한다. 홍천 산돌식품도 아이의 초교 진학 전까지 매월 5만 원을, 초교 입학 시 10만 원, 중학교 20만 원, 고등학교 30만 원, 대학교 100만 원 등의 교육비를 각각 지원한다. 춘천 바디텍메드는 출산축하금과 더불어 2014년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횡성 국순당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택자금 및 생활안전자금 0.5% 저리 대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기업들의 각종 출산 지원 대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등이 강구돼야 한다. 최근 부영은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에게 출생아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했다. 출산장려금을 급여 형태로 주게 되면 직원들이 고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고려해 지급 형태도 '증여' 방식을 선택했다고 한다. 직원이 받는 출산장려금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면 소득세와 지방세 등으로 4,180만 원을 떼야 할 판이다. 이에 부영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직원이 증여세(10%)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문제는 또 있다. 회사도 출산장려금을 받은 직원 1인당 2,600만여 원 정도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못 받는다.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은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도 급여의 연장선상으로 간주한다.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의 출산이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지원하는 수당에 대해선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게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 혜택의 전부다. '포스코 네쌍둥이'로 유명해진 부부도 회사 측이 지급한 카니발 차량과 출산축하금 및 양육지원비 5,600만 원이 근로소득에 포함돼 고액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한다. 국민에게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 준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하루빨리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한다. 파격적인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할 때다.

출처 : 강원일보 오피니언

정책제언 II

강원 겨울 축제 판 키워야

화천 산천어축제를 포함해 도내에서 열린 겨울 축제가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태백산 눈축제에도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춤과 눈이 많이 내리는 기후 특성상, 강원도는 겨울 축제의 최적지입니다. 인근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축제를 마련하고 있지만, 날씨 등 여러 환경이 뒤받쳐 주지 않아 제대로 치러지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도내 겨울 축제는 여행 경기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겨울 축제가 더욱 발전하고, 특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개최하지 않는 시군에서도 지역 특성을 살린 매력적인 소재를 발굴해 신규 축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23일간의 대장정 끝에 막을 내린 화천산천어축제는 이름에 걸맞은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누적 방문객 154만 명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최고 겨울 축제의 흥행 신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려웠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올해는 외국인 방문객 수가 8만 명을 넘어서며 글로벌 축제의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지난 26일 개막해 2월 4일까지 열리는 태백산 눈축제장에도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평창 대관령 눈꽃축제는, 지난 27일 대관령면 횡계리 송천 축제장에서 개막해 2월 11일까지 열려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겨울 축제의 경제 효과는 이미 입증되고 있습니다. 2023년 산천어 축제 결과를 조사한 강원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방문객 1인당 평균 지출비용은 6만 6,022원으로 지역에 미친 직접 경제효과는 약 865억 2,000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1,988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뒀으며 설문에 응한 지역업체 중 40% 이상이 평소 대비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강원도의 겨울 축제는 한 단계 더 진화해야 합니다. 기존의 체험 프로그램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다양한 소재를 발굴해야 합니다. 축제 간 벤치마킹을 통해, 호응을 얻은 체험 프로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 축제도 개최할 여지가 많습니다. 강릉의 관광 인프라와 자연환경을 활용할 겨울 축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습니다. 양구군도 겨울 축제 개최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됩니다. 기존 축제 개최지에 인근 지역 축제가 새로 생긴다면 당일 여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1박 이상 강원도에 머무르는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눈·얼음 축제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면, 도 전역에서 겨울특수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 오피니언

정책제언 |||

강원 고용 안정성 확보 과제

강원지역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앤데믹이 고용률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노동자의 취업 증가세가 기대에 못 미친 반면, 고령층의 취업이 늘어났습니다. 서비스업 고용 비중이 높은 것도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연령별, 업종별로 균형을 이루는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강원 지역 고용률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강원통계지청의 ‘2023년 연간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강원지역 취업자는 84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 3,000명, 2.8% 증가했고, 고용률은 63.3%로 1.5%p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도내 고용률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60%대를 돌파한 이후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1년 새 62.3%에서 60.8%로 추락했으나,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강원지역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증가세는 눈에 띕니다. 2019년 21만 4,000명이었던 종사자는 2020년 20만 3,000명으로 줄었다가, 2021년 20만 5,000명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지난해 21만 1,000명을 기록, 2019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종사자는 14만 명으로 2019년의 13만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청년층 일자리와 고용 안정성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지난해 도내 정규직 노동자는 40만 6,000명으로 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계약직인 임시근로자는 15만 7,000명으로 같은 기간 10.4% 늘며 10%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이 전체의 30.7%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데 비해, 20~29세는 10.7%에 그쳤습니다.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정규직과 청년층 노동자의 비중을 높이는 일이 건강한 고용 구조를 만들 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산업을 육성해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유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지역 업체의 성장을 돋고, 창업 시장을 확대해야 합니다. 더불어 청년층, 고령층을 아우르는 정책 당국의 고용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 오피니언

정부동향

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 시설 설치·운영 안내서 펴내

- 스마트농업 시설 설치에 관한 필수정보 망라 -
- 농촌진흥청 내외부 전문가 자문 제작…현장 밀착형 내용 수록 -
- 스마트농업 시설 설치 전후 사항 체계적 정리, 영농초보자도 이해 쉬워 -

- ▣ 스마트농업은 기후변화, 농업인 고령화, 환경파괴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스마트농업 시설 설치 전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 등을 종합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 ▣ ‘스마트농업 시설 설치 및 관리 안내서(가이드라인)’는 스마트농업 시설을 사용 목적(상황)에 맞게 설계하고, 시설을 조성한 이후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필수정보를 담고 있다.
- ▣ 농촌진흥청의 시설원예 분야 연구, 기술 보급, 농산업경영 분야 담당관과 시설재배 기술 전문상담사(컨설턴트), 스마트농업 시설 시공 기술사, 스마트농업 기자재 검정 담당자,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제작에 참여했다.
- ▣ 이 안내서는 지역 농촌진흥기관의 스마트농업 사업 관리 운영자를 비롯해 스마트농업 시설 설치와 관리 교육 담당자, 스마트농업 시설을 도입하려는 귀농인·농업인 외에도 스마트농업 개론을 강의하는 대학교수, 전공 대학생에게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 ▣ 1권에서는 스마트농업 시설 설치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재배 품목 선정 △재배 방식 선정 △농지 선정과 취득 △스마트농업 시설 시공 △스마트농업 기자재 설치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 ▣ 2권에서는 스마트농업 시설 설치 후 관리 사항으로 △계절별 시설 내부환경 관리 △작물(딸기, 토마토 중심) 생육 단계별 관리 △스마트농업 기자재 관리 요령 △스마트농업 정보(데이터) 관리 요령을 담았다.
- ▣ 또한, 스마트농업으로 완숙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애플수박을 재배하는 농가별 시설 특징과 재배 방식, 장비(제어 시스템, 감지기, 구동기 등) 현황 등도 함께 실었다.
- ▣ 부록으로는 스마트농업 교육과 실습을 진행하는 시군별 경영 실습 임대 농장 목록과 스마트농업 실증(테스트베드) 교육장, 스마트농업 관련 누리집 정보를 수록했다.
- ▣ 안내서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 누리집에서 책 이름을 검색해 볼 수 있다.
-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김지성 과장은 “스마트농업의 원리를 이해하고, 스마트농업 시설을 설치할 때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안내서를 만들었다.”라며 “스마트농업 시설 설치에 관한 고시 변경 등 앞으로 달라지는 내용은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국폴리텍대학

폴리텍대 “취업률 62.8% ‘신중년과정’ 눈여겨보세요”

- '23년 상반기 수료생 취업률 62.8% 달성, 50대와 남성 참여 높아 -
- 올해 2,550명 대상 전통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직종 등 훈련 -
- 노사발전재단과 협업해 전직지원 서비스와 직업훈련 연계 강화 -

- ▣ #. 옥외광고업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배균복(50·남) 씨는 경기 불황으로 전직을 고민하다가 현장 기술자를 보고 활용도 높고 유용한 전기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배 씨는 지난해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신중년특화과정에 입학해 6개월간 전기설비 실무를 익혔다. 전기기능사 자격증까지 따고 취업해 태양광 설비 업체에서 전기공사 업무를 맡고 있다. 배 씨는 “다시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자격증을 취득하자마자 빠르게 취업할 수 있었다”라면서 “전기 기술을 익히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고, 나이가 많아도 일할 수 있어 재취업을 원하는 누구에게든지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 **한국폴리텍대학**(이하, '폴리텍대')은 지난해 상반기 신중년특화과정 취업률*이 62.8%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과 비교해 2.6%p 상승한 수치다. 이 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에게 전직, 재취업에 필요한 3~6개월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2018년 개설 이래 60%** 내외 취업률을 기록하면서, 배 씨와 같은 재취업 성공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 <참고> 고용행정통계 '22년 실업자훈련취업률 현황 51.6%, '23년 하반기 수료생 취업 진행 중

- 지난해 신중년특화과정 훈련생의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50대가 40.5%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60대 이상이 35.8%, 40대가 23.7%였다. 성별 비율은 남성이 78.9%로 여성보다 많았다. 취업률(상반기 수료생)은 남성 60.6%, 여성 69.6%로 여성의 취업률이 더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40대(73.9%), 50대(64.7%), 60대 이상(55.8%) 순이었다.

- 폴리텍대는 올해 중장년 2,550명을 대상으로 신중년특화과정을 운영한다. 설비관리, 건설기계, 용접 등 자격 취득에 따라 재취업이 쉽거나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직종들이 마련돼 있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변화하는 직무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미래형 자동차, 정보기술(IT)융합 전기설비 시공관리 등 전통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훈련도 처음으로 실시한다.

- 또한,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과 협업해 재단의 전직지원 서비스와 직업훈련 연계를 강화한다.

- 재단 전직지원 서비스 이용자는 폴리텍대 '꿈드림공작소*'를 통해 직업훈련 직종을 탐색해 볼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꿈드림공작소 직업체험 주간(1.22.~1.30.)에는 248명의 중장년이 참여해, 높은 만족도(4.89/5점)를 보였다. '꿈드림공작소' 직업체험을 통해 전직 방향을 설정하고, 신중년특화과정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기술교육은 물론, 재단의 생애경력설계 및 재취업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다.

*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시설·장비를 개방하고 단기 기술교육, 체험학습 등을 제공하는 사업

- 폴리텍대와 재단은 이날 대전에서 사업 담당자 공동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한편, 폴리텍대는 내달 중순까지 상반기 신중년특화과정(6개월) 훈련생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kopo.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법정부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 마련

- 노로바이러스·살모넬라균 집중관리, 식중독 발생 원인 신속 규명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등 2024년 식중독 예방관리 방안 논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월 15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교육부 등 34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법정부 식중독대책협의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 부처별 식중독 예방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식중독 관리강화를 위한 법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중앙행정기관(11개), 지자체(17개), 관련 협회 등(6개)

- 2024년 정부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추진 전략은 ▲노로바이러스 및 살모넬라 식중독 집중관리 ▲현장 맞춤형 교육·홍보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부처간 협력 강화 등이다.

- ① 2023년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노로바이러스와 살모넬라에 대한 법정부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 2023년 식중독 발생 건수(원인군별, 잠정) : 노로바이러스 68건(19%) > 살모넬라균 47건(13%) > 병원성 대장균 47건(13%)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패류 생산 해역의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 검사를 실시*하고(해수부), 지하수나 하천수를 사용해 재배하는 쌈채소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농식품부)한다.

* ▲생산 해역에서 패류 채취 및 분석 실시(매주 1회), ▲검출 시 출하 연기 권고 조치 또는 '가열조리용' 표시부착

- 또한, 생식용 굴 수거·검사를 2배(240건→480건) 확대하고, 노로바이러스 인체 간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조리시설, 원아 활동공간 등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사전에 검사한다.

-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달걀을 생산하는 농가의 달걀에 대한 검사를 연간 4천 건 실시하고(농식품부), 유통단계 달걀에 대한 검사를 500건으로 확대(기준 300건)한다.

- 또한,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김밥 등 달걀을 원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대상으로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 ② 어린이집 등의 급식 안전관리를 위해 조리종사자 대상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손 씻기, 보관온도 준수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 아울러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 ③ 식중독의 대규모 확산 방지 및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합동 모의훈련을 연 4회 실시한다.
 - 식중독 담당자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급식시설 등에서 단계별 대응 절차에 대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보고, 현장조사, 결과보고 등 식중독 대응 업무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집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 오유경 처장은 “식중독의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고 발생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기후변화와 외식 섭취 증가 등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체험 신청하세요!

- 방송제작 시설과 장비를 탑재한 이동형 나눔버스 체험 기회 제공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조한규)은 읍·면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의 미디어 소통 능력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체험 신청을 접수한다.
- 미디어나눔버스는 방송제작 시설과 장비를 탑재한 이동형 스튜디오 차량으로, 미디어로부터 소외된 지역민에게 미디어 체험과 교육을 진행하는 버스이다. 올해 총 850곳을 찾아가 미디어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미디어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지원 대상은 ▲ 소외계층 지원 기관·단체·모임 ▲ 지역민 대상 행사·박람회 등 운영 기관 ▲ 자유학년제를 시행하는 학교 등으로, 특히 시청자미디어센터 방문이 어려운 읍·면지역의 기관 및 단체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 미디어나눔버스 프로그램은 아나운서·기자가 되어보는 영상미디어 체험, 디제이(DJ)·리포터 역할을 맡아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라디오 체험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최근 일상화되고 있는 키오스크(kiosk) 체험을 통해 노인 등 미디어 접근 취약계층의 생활 속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사용법도 안내한다.
- 방통위는 지난 ’17년 미디어나눔버스 2대를 시작으로 현재 8대를 구축했으며 ’23년까지 전국 17개 시·도 대상 총 1,775회 운영을 통해 섬마을, 폐광지역 등 도서산간 지역 학교에 찾아가 센터 접근이 어려운 지역민의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고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김홍일 위원장은 “현재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사용자의 경험도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주변에는 미디어 격차로 소외된 지역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라며, 특히 “키오스크 등 최근에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사용방법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미디어나눔버스’의 신청방법과 일정은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www.kcm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 마감은 3월 8일까지이다.

정책브리프 |

인구감소지역 활력제고를 위한 생활인구의 도입



이 원 도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도입 배경**

- 인구관리 및 양적확대 중심의 인구정책에서 인구감소시대 구조적 위험 대응 및 장기적인 지역 인구감소 적응을 위한 인구전략으로 정책방향이 변화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이후 행안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근거 하여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를 지정하였음(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 2021. 10.19.)
- 이러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 제고를 위해 대안적 인구개념으로써, 주민등록인구와 함께 체류인구, 등록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인구를 포함하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를 도입하였음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는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3-33호)을 통해 구체적인 정의와 작성 지침이 마련되었음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세부 요건 및 현황**

- 인구감소지역에 월 1회 이상,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사람을 생활 인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은(24년도부터) 1개월 주기로 산정하여 공표될 예정임
- 23년도에 생활인구 시범사업 진행을 위해 민관협력 협의체(가칭)가 구성되었으며,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2분기(4월, 6월)의 생활인구를 산정하여 그 결과를 2024년 1월 1일에 공표하였음
- 생활인구 시범산정 결과에서, 7개 시군지역 공통으로 체류인구가 주민등록인구보다 많게 나타났으며, 시군지역의 특성에 따라 체류인구의 숙박특성과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가 존재함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정책활용 강화방안**

- 24년도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로 확대되어 산정·공표되며, 생활인구의 경제활동 특성 탐색을 위해 신용카드 소비 데이터 추가 검토와 생활인구 고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임
- 향후 인구감소지역 인구활력 제고를 위해 특례 및 재정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지역 모니터링(monitoring)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인구 동향파악 및 전망 예측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01 새로운 인구개념의 등장과 필요성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도입 배경

- 세계적으로 인구는 2040년 정점 이후 점진적으로 2070년까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나라는 총인구 감소가 이미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국가적으로 빠른 대응이 필요함
 - 특히 지방소멸 방지와 장기적인 인구감소 적응을 위해선 지역별 인구 현황 및 특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 및 이해가 요구됨, 즉 인구통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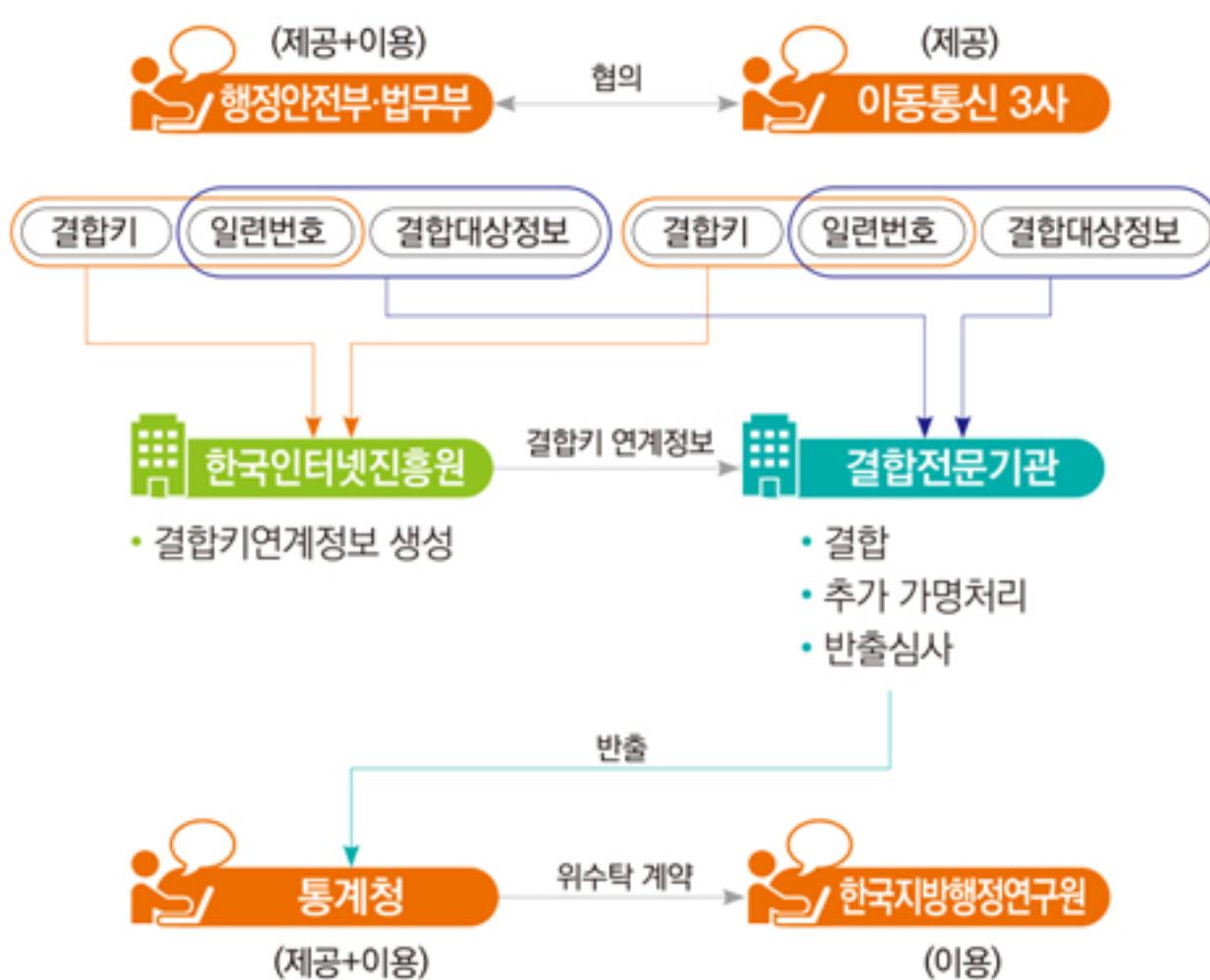
- 인구관리 및 양적확대 중심의 기존 인구정책에선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 개인의 일상생활이 더욱 공간적으로 확장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심한 지역 유출입 유동인구(ambient population)의 다양성 및 역동성이 반영되지 못함
- (주소지 외) 실제 생활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인구활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인구의 규모 추정(estimation)과 특성 산정(quantification)을 위한 새로운 인구개념의 정의와 도입이 필요함
- 특히 인구감소시대에 지역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대안적 인구 (alternative populations)개념을 검토하여, 도입하는 것이 요구됨
- 행안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하여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을 지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 2021.10.19.)
- 또한,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제고를 위해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인구를 포함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는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3-33호)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월 1회 이상,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사람을 생활인구로 규정(제2조제1 항)하며, 다양한 공공과 민간 빅데이터를 통해(제8조) 산정한 결과를 월별로 공표(제6조)하는 지침(guidance)이 마련되어 있음
- 특히 향후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는 개별 데이터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세분된 시공간 단위에서 더 시의성 있는 인구현황 및 특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02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현황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시범사업(23년도)

- 행안부-통계청은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23년도 2분기(4월~6월)의 생활인구를 산정하여 그 결과를 최근 공표하였음(통계청 2024; 행정안전부 2024)
- 생활인구 시범사업 진행을 위해 민관협력 협의체(가칭)가 구성되었으며, 공공(행안부 주민등록, 법무부 외국인 등록·국내거소신고)과 민간 빅데이터(이동통신 3사 모바일 데이터)의 가명결합을 통해 생활인구를 산정하였음
- 이를 위해 협의체 내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업이 요구되었음, 특히 안전한 공공 및 민간 데이터의 결합을 위해 개인정보 삭제 및 가명처리, 암호화된 결합키 구성과 같이 민감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반영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데이터 명세서 작성과 적정성 검토를 거쳐 가명결합이 진행되었음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협의체(가칭) 가명결합 업무 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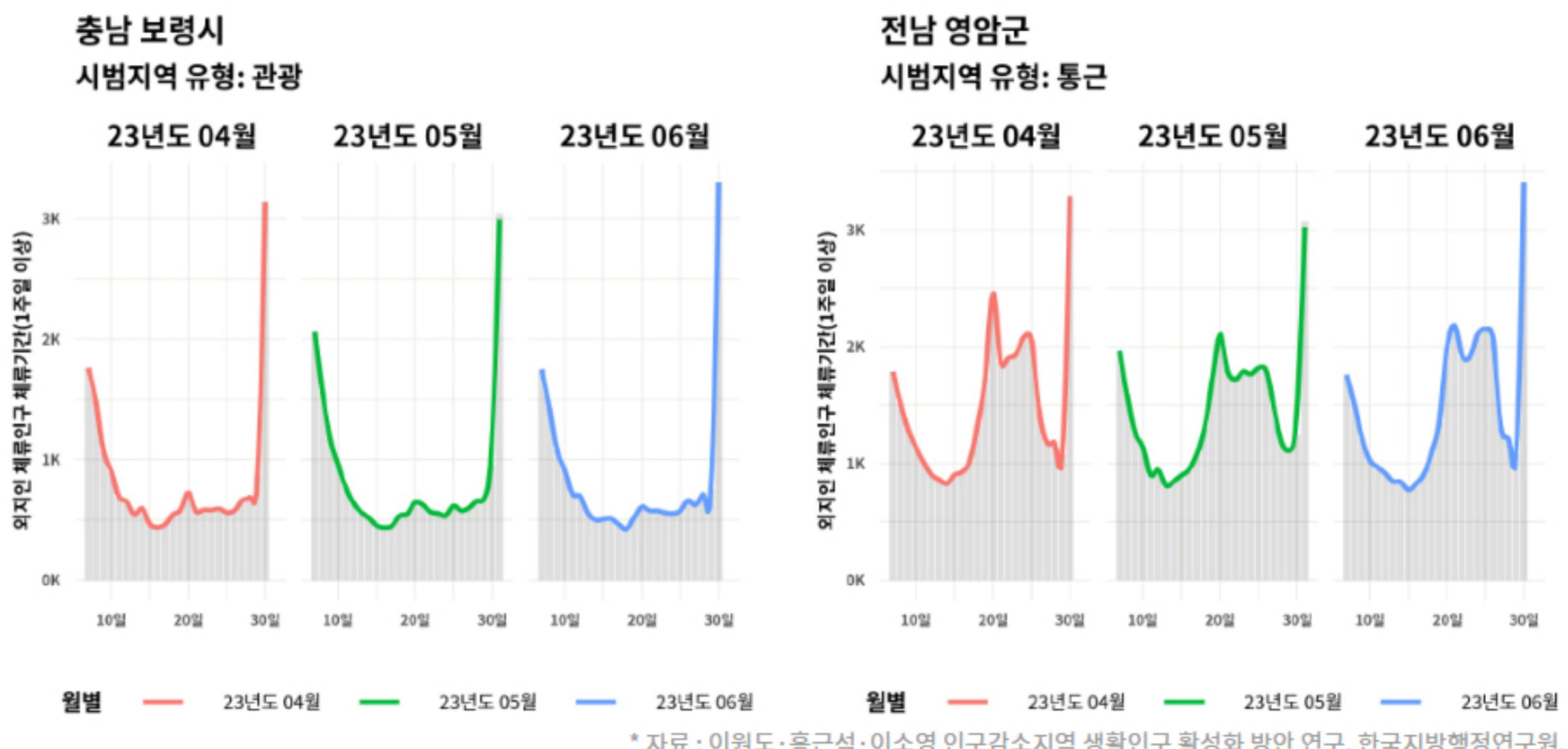


* 자료 : 저자 작성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시범사업(23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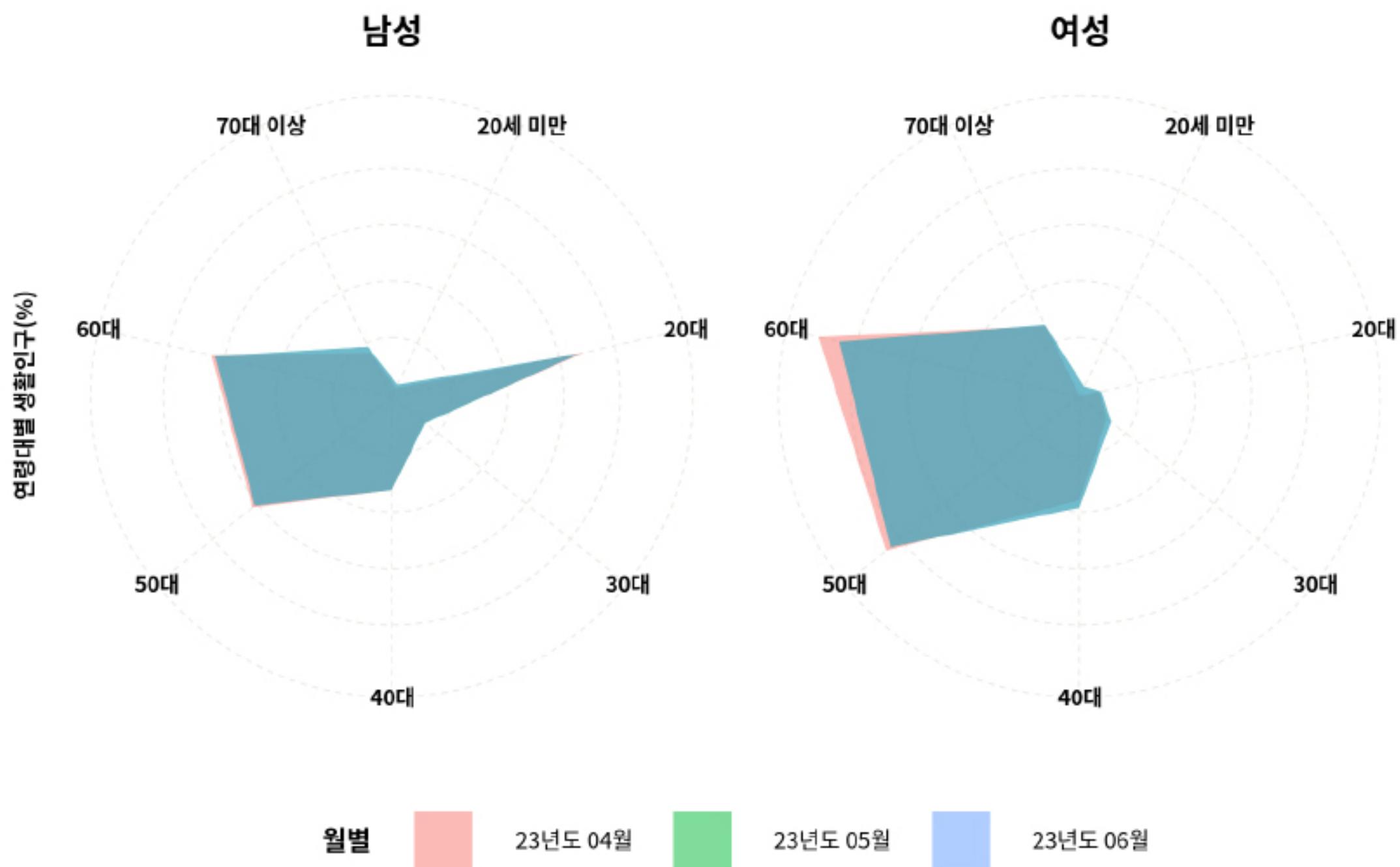
- 생활인구 시범산정 결과에서, 7개 시범지역 공통으로 체류인구가 주민등록인구보다 많게 나타났음
- 유형별 체류인구의 숙박특성
 - 관광유형(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이 통근(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통학(경남 거창군)유형보다 주민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 하지만 체류인구의 숙박특성에서 통근(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과 군인(강원 철원군)유형의 평균 숙박일수가 다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더 길었음
 - 다시 말해, 체류인구 중 비정기적 목적(관광)으로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체류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정기적 목적(통근, 통학)보다 장기 체류인구 비중이 작게 나타났음
 - 이러한 체류인구의 숙박일수 차이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방문(활동)목적 간의 연관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유형별 체류인구의 인구학적 특성
 - 이와 함께 체류인구는 인구학적 특성(예:연령대별, 성별, 거주지역별)별 분포의 차이를 보이며, 특히 통근(전남 영암군)과 군인(강원 철원군)유형은 남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의 비중이 군인 (강원 철원군)과 관광(충남 보령시)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음
 - 군인(강원 철원군)유형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체류인구가 평균적으로 약 4.5만명 더 많게 나타났으며, 20대 남성의 체류인구 비중 (22%)이 매우 높고, 다음으로 남녀 공통으로 60대 이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남성 30%, 여성 40%)
 - 이러한 체류인구의 인구학적 특성별 탐색적 분석결과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인구감소 대응책 마련 중 하나인 단기적인 생활인구 확대 및 방문자 경제 활성화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장기체류(1주일 이상)의 숙박일수 비교 •



• 체류인구의 인구학적 특성 분포(강원 철원군) •

강원 철원군 연령대별 외지인 체류인구(%)



* 자료 : 이원도·홍근석·이소영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03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정책활용 강화방안

| 24년도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 행안부-통계청은 지역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24년도엔 생활인구 산정을 89개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분기별로 공표할 예정임
 - 또한, 가능한 추가적인 빅데이터(예: 신용카드 소비 데이터)를 검토하여, 하반기에는 생활인구의 현황과 함께 인구 감소지역 내 주요 활동내역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함께 체류기간(예: 정기적, 비정기적) 및 목적(예: 통근, 관광 등)을 추론할(inference) 수 있는 생활인구 고도화 및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선 관계인구 개념의 도입을 통해 생활인구를 단계별(방문·체류·거주인구) 유형의 구분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인구감소지역이 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② 계절적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③ 어떠한 활동을 위해 주로 방문하는 지와 같이 지역 인구감소 대응에 유용한 정책 시사점 발굴이 가능하도록 생활인구 통계의 양·질적 고도화가 요구됨

|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지역활성화 전략에 활용

- 인구감소지역 모니터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설치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에선 공공 및 민간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반기별로 인구감소지역 자체에 제공하여, 22~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한 컨설팅에 활용되었음
 - 24년도에는 반기별로 생활인구 현황 및 특성 분석결과를 정리·작성하여, 89개 전체 인구감소지역 자체에 요약 보고서(brief report)를 제공할 예정임

- 인구감소지역 거버넌스(민관산학 협의체)에선 이를 활용하여 지역활력 감소 및 인구감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monitoring)과 면밀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정책활용 방안

- 행정경계를 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적 범위, 즉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설정을 통해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활인구의 일상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방문·체류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문화·예술·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지원에 활용할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제14조)하여, 인구감소지역 인구활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교부세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다만 이를 위해선 생활인구의 변동성과 대표성 지표에 관해 추가적인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함

출처 : 이원도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

정책브리프 II

강원도의 랜드마크는? : 자연이 아닌 혁신적 창작물이어야



정 윤 희 |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강원도의 랜드마크는? : 자연이 아닌 혁신적 창작물이어야

- 도시는 경쟁하고 있다 도시 간 경쟁은 글로벌 추세 임과 동시에 국내 도시 간에도 그 경쟁은 치열하다 많은 도시가 다른 도시들과 차별화하여 자기만의 매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이미 형성된 랜드마크를 활용하거나, 새롭게 조성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강원도와 18개 시군도 크게 다르지 않다.
- 강원도는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수려한 자연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인식되고 있다. 훌륭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랜드마크가 가진 여러 기능 중 ‘도시경쟁력 강화 요소’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물이 랜드마크인 것에 여러 한계점이 존재한다.
- 따라서, 강원도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기 위한 요소로 랜드마크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자연보다는 혁신적 창작물을 만들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의암호가 아니라 춘천대교를 랜드마크로 할 때 그 쓰임새가 더욱 확장될 수 있다. 혁신적 창작물을 랜드마크로 삼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앞으로 강원도의 랜드마크는 활용 제약이 많은 자연보다는 ‘강원다움’과 ‘혁신성’을 갖춘 창작물로 홍보하자.

01 랜드마크란 무엇인가?

| 랜드마크의 개념

- 랜드마크는 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다른 지역과 구별되게 하는 지형 또는 시설물
 - 랜드마크는 ‘땅(Land)’과 ‘표시(Mark)’가 조합된 단어로 먼 곳에서도 잘 보이는 지형지물
 - 높은 건축물 및 조형물 외에 널리 알려진 문화재·관광지 등 포함

- 사람들이 도시환경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방향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눈에 띄는 도시 구성 요소 (Kevin Lynch, 1960)
 - 랜드마크는 도시에서 '식별성(legibility)' 또는 '가시성(visability)'이 높은 지형 또는 시설물
 - 현대 도시에서 랜드마크는 '도시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요소이자,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브랜드로 작용

| 일본은 1970년대부터 댐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지하고 대응

- 소양강댐이 준공된 시기인 1973년 10월에 이미 "수원지역대책특별조치법(이하, 수특법)"을 제정하여 댐 주변지역 중심으로 활성화대책 수립 기반을 마련함
 - 댐 건설에 따른 주민의 이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등에 큰 변화를 초래하기에 댐 주변의 도로, 상·하수도, 교육시설, 진료소 등 생활기반을 정비토록 함
 - 수특법의 14조에는 국가 및 지자체는 수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댐으로 인해 편익을 보는 지역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임

• 세계적 랜드마크 •



프랑스 파리 에펠탑



영국 런던 런던타워브릿지



미국 뉴욕 자유의여신상

* 출처 : Getty Image (2024년 02월 13일 검색)

| 도시에서 랜드마크는 왜 중요한가?

- 도시 정체성 확립 및 도시 이미지 제고를 통해 차별화된 도시경쟁력 확보에 일조
 - 파리 에펠탑 : 파리를 로맨틱한 도시로 인식시키는데 기여한 랜드마크
 - 두바이 버즈칼리파 : 두바이가 현대적 도시이며, 비즈니스허브로 인식되는데 일조
 -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 시드니를 문화 및 예술의 중심지로 인식시키는데 기여
- 국내외 관광객을 유인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
- 역사적 사건 또는 문화와 연계, 문화적 가치 전승의 매체로 역할
 -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 그리스의 역사와 문화를 전 세계 및 후세에 전달하는 역할
 - 베를린 베를린장벽 : 독일 분단과 통일의 의미를 상징하고 전달하는 역할

| 랜드마크가 되는 기준은?

- 랜드마크를 결정하는 요소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으나, 대체로 다른 시설과 차이를 만드는 두드러진 특징으로 시각적 요소와 의미적 요소, 입지여건 등이 해당
- 혁신성 : 기존에 보지 못했던 기능과 디자인을 담고 있는 경우로, 흔히 '최초'라는 수식어로 랜드마크 인정
 - 1893년 시카고 박람회에 처음 등장한 대관람차
 - 1914년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세계 최초의 운하인 파마나운하
- 규모성 : 다른 환경과 차별되는 기준으로 크기 또는 높이를 언급하는 경우로, 흔히 '최대'라는 수식어로 랜드 마크 인정

- 1889년 완공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이었던 파리 에펠탑
- 2010년 완공 이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두바이 버즈칼리파
- 디자인(조형성) : 일반적이지 않으며 두드러지게 눈에 띠는 시각적 특성을 지닌 경우로, '유일', '최고'라는 수식어로 랜드마크 인정
 - 해안에 위치한 입지 특성을 반영하여 항해 중인 배의 돛을 연상시키는 상징적 디자인을 구현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 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을 형상화하기 위해 나팔모양의 280개 콘크리트 구조물로 강위에 만든 인공섬인 뉴욕의 리틀아일랜드
- 의미성(스토리텔링) : 사람들이 찾아가고, 공감할 수 있는 풍부한 스토리텔링 요소를 가진 경우로 랜드마크 인정
 - 로마의 콜로세움 등 다양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역사적 건축물
 - 많은 한국 사람들이 싱가폴 마리나베이호텔과 말레이시아 트윈빌딩을 찾는 이유에는 한국 기업이 세계적 랜드마크를 건설하였다는 스토리도 역할

● 다양한 기준에 의해 인정받는 랜드마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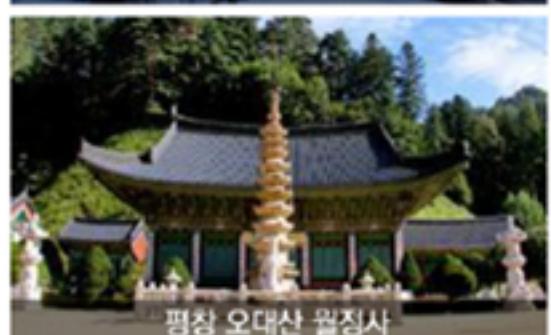
* 출처 : Getty Image (2024년 02월 13일 검색)

02 강원도의 랜드마크는?

| 강원도 랜드마크에는 무엇이 있을까?

- 강원도는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으로 아름다운 산과 해변, 역사적인 건축물, 지역성을 담은 문화시설 등 다양한 랜드마크가 존재
 - 국립공원으로 대표되는 자연 : 설악산·오대산 등 아름다운 산과 계곡, 동해안 바다
 - 동계스포츠와 평창동계올림픽 : 지역의 이미지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행사와 축제로도 형성. 2018년 개최된 동계올림픽으로 각인된 지역 이미지로 인해 알펜시아 등 올림픽이 치러진 경기장을 랜드마크로 인식
 - 동해안의 해변 : 양양 서피비피 등 해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해변과 동해 바다의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안목 해변 커피거리를 랜드마크로 인식
 - 역사적 명소 : 강릉 오죽헌·양양 낙산사·고성 통일전망대 등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지닌 명소를 랜드마크로 인식

● 강원도의 랜드마크 ●



| 자연 중심 강원도 랜드마크의 특징과 한계

- 강원도 랜드마크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자연' 중심의 랜드마크 형성
 - 설악산·동해안 등 산과 바다인 자연 자체가 강원도의 대표자원이자 랜드마크 역할
 - 낙산사·오죽헌 등 역사적 랜드마크 역시 자연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는 랜드마크로 역할
 - 뮤지엄 산·이상원미술관 등 지형 변형을 최소화하여 자연과 조화되는 건축물 조성을 통해 랜드마크 조성
 - 오색케이블카 등 논의되는 랜드마크 역시 자연을 배경으로 지혜로운 이용을 전제로 함

| 도시마케팅 및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자연 중심 랜드마크의 한계

- 랜드마크는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며 최근에는 도시마케팅 차원에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이 강조되는 추세. 그러나,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자연이 랜드마크인 경우 아래와 같은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 환경보호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과제 : 랜드마크를 활용한 관광 자원 개발 행위가 환경 파괴와 생태계 교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갈등 소지 내포
- 접근성과 인프라 개발 과제 : 자연 중심 랜드마크는 도심에서 떨어져 접근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도로·숙박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할 수 있어 지역활성화 까지 많은 과제 산재
- 계절성과 날씨의 영향 : 자연적 랜드마크는 계절 변화와 날씨 조건에 따라 방문객의 경험이 달라질 수 있어 방문이 특정 계절에 국한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불쾌한 경험이 생길 수 있어 제약
- 경제적 가치 측정의 어려움 : 도시마케팅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략 수립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나, 자연 자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 측정이 어려워 갈등 소지 내포

03 강원도의 랜드마크 조성 전략

| 강원도 랜드마크는 자연보다는 사람이 만든 시설로 : 의암호가 아니라 춘천대교

- 춘천은 '호반의 도시'라는 자연 중심의 도시이미지가 형성된 도시로, 춘천시의 랜드마크는 봉의산과 북한강을 따라 형성된 호수로 인식
- 자연 랜드마크는 환경보호와 접근성 등의 이유로 도시마케팅적 활용에 제약이 따름
 - 봉의산은 시각적 식별성을 강화하고, 도심 내 자연으로 적극 활용을 위해 전망대 등의 설치가 제안된 바 있으나 문화재 및 환경 보호를 위해 본격 논의되지 않음
 - 북한강과 의암호는 춘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 요소이나, 주로 '조망 대상'으로만 활용되어, 도시마케팅 및 지역활성화 차원으로 활용하는데 제약
- 강과 호수보다는 강에 건설된 교량을 랜드마크로 활용, 관광자원 및 지역활성화 요소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음
 - 의암호에 건설된 춘천대교는 레고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원형주탑의 사장교로 디자인적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음
 - 특히, 세계 최초로 대형 교량에 초고성능콘크리트(UHPC)를 적용하여 보강거더 단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디자인적 완성도를 높이고 있음
-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연의 의암호보다는 혁신의 아이콘인 춘천대교를 랜드마크로 적극 홍보 및 인지시키는 것이 유리

• 춘천대교 •



• 교량이 랜드마크인 세계적 사례 •



미국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브릿지



네덜란드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다리



영국 런던 밀레니엄브릿지

| ‘최고’, ‘최대’, ‘최초’가 아니라 ‘강원다움’과 혁신을 기반으로 조성

- 예전과 달리 규모가 랜드마크를 결정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인은 아니며, 높이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이 무조건적 랜드마크가 되는 시대는 아니므로(김종호, 2002), 지역정체성의 핵심 가치인 ‘강원다움’을 기반으로 랜드마크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물 도입
 - 디지털 기술 체험 : 랜드마크 조건 중 혁신성과 관련하여 현대적 기술, 특히 디지털 기술과 인터랙티브 미디어의 통합을 통해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랜드마크 조성
 - 재생프로젝트와 연계 : 폐허가 된 산업시설이나 역사적 건물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여 리모델링하는 랜드마크 조성 사례 증가,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현대적 용도로 재활용
 - 아이콘적 건축물 : 세계적인 유명 건축가에 의해 설계된 혁신적 상징적 건축물

• 새로운 경향성을 지닌 랜드마크 •

디지털 기술 체험



오스트리아 Ars Electronica Center



일본 토쿄 Teamlab Planet

재생프로젝트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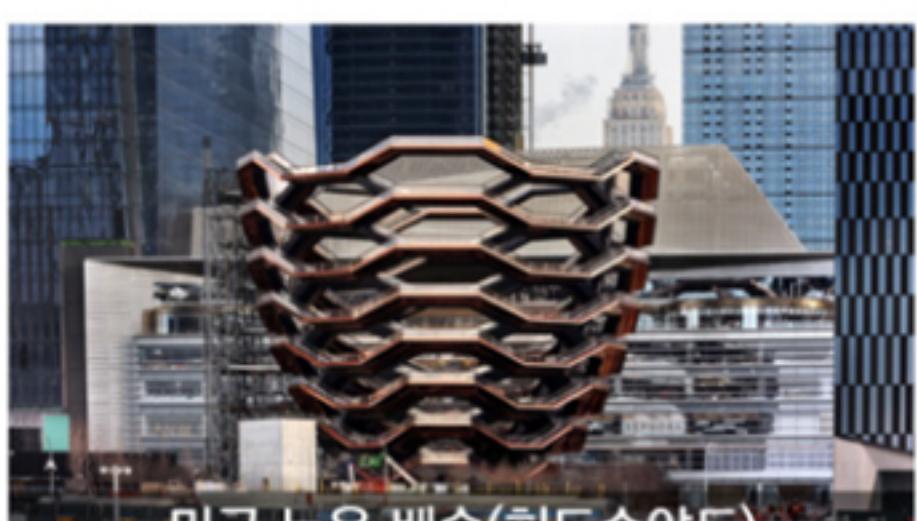


영국 런던 테이트모던



독일 함부르크 엘브필하모니

아이콘적 건축물



미국 뉴욕 베슬(허드슨야드)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

| 랜드마크 가치 보전을 위해서는 관리 노력 필요

- 현대 도시에서 랜드마크는 도시이미지와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많은 도시에서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사람들에게 랜드마크로 인지시키는 과정이 쉽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형성된 랜드마크도 꾸준한 관리가 중요
- 유럽의 주요 국가 및 도시는 세계인들에게 형성된 도시이미지와 랜드마크에 대한 인지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
 -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보호 노력 : 7층 이상 건축물 조성 불가, 전신주 등 사회기반 시설 지하 매설 등
 - 이탈리아 : 로마는 성 베드로 성당보다 높은 건축물 조성 불가, 유명 랜드마크내 음식물 서비스 제한
 - 미국 뉴욕 : 랜드마크법 (또는 랜드마크 보존법)을 제정, 블록별 높이의 총량을 정해 저층 소유자들이 옥상 위 공중권(Air Rights)을 판매
- 문화재·자연물의 랜드마크 기능 유지를 위해 개발권 양도제 등의 도입 검토 필요

|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랜드마크

- 모든 지자체가 랜드마크 조성을 추진하면 마케팅적 한계가 발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변 지역으로 파급효과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
- 광역·도시·지구 등 인지 범위 및 활용 목표 차이에 따른 랜드마크 위계 설정 필요

출처 : 정운희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정책브리프III

공간컴퓨팅(Spatial Computing) 혁명의 파급효과와 의미 : N.E.X.T



이승환 | 연구위원(혁신성장그룹)

공간컴퓨팅 시대의 개막

- 컴퓨팅(Computing)의 패러다임이 PC, 모바일을 넘어 공간(空間)으로 진화하며 새로운 미래를 예고
 - 컴퓨팅은 정보를 처리하는 넓은 범위의 활동을 의미하며 컴퓨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입력, 처리, 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
 - * 계산은 컴퓨팅의 한 부분이며, 컴퓨팅은 계산 외에도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데이터 구조 등의 개념과 연관
 - 컴퓨팅은 개인용 컴퓨터(PC)가 주도했던 퍼스널 컴퓨팅, 스마트폰이 이끈 모바일 컴퓨팅 시대를 지나 공간컴퓨팅의 시대로 진입
 - 공간컴퓨팅은 기계가 실제 물체와 공간을 참조하고 조작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인간과 기계가 함께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
 - * MIT 미디어랩(MIT Media Lab) 출신 시몬 그린우드(Simon Greenwald)가 2003년 발표한 자신의 논문에서 공간컴퓨팅이라는 용어를 사용
 - * 공간컴퓨팅은 가상과 현실을 혼합한 연산(Computation)으로 물리적 세계와 이상적인 세계 간의 경계를 허물게 함
 - * 공간컴퓨팅은 컴퓨터 속으로 공간을 가져오며(Bring space into the computer) 또한, 사물에 연산 정보를 넣기도 함(Injecting computation into objects)

- 공간컴퓨팅은 메타버스(Metaverse)를 구현하는 핵심 기반을 제공
 - 공간컴퓨팅은 MR(Mixed Reality), AR(Augmented Reality), VR(Virtual Reality)를 구현하는 다양한 요소기술과 융합하여 메타버스 경험을 제공
 - 공간컴퓨팅 기반으로 구현된 MR, AR을 통해 사용자는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도 있고(See the world differently), VR로 다른 세상을 볼 수도 있으며(See the different World) 이 경험의 총체가 메타버스

• [그림 1] 공간컴퓨팅과 메타버스 •

Technology	Blending technology into the world ...	to see the world differently or see a different world	
Description	Spatial computing Software enables interaction	Mixed reality (MR) Graphics linked to reality	Augmented reality (AR) Information not linked to reality	Virtual reality (VR) 100% computer graphics
Experience	N/A	Merging of reality and MR: User's sense of being immersed is gone	Partly immersive: User holds a sense of presence in the real world with digital overlay	Fully immersive: User's visual sensation is controlled by the system inside the virtual world
Immersive-reality technologies will have a significant role to play in the metaverse				

자료: Mckinsey&Company(2022)

- 애플은 ‘공간컴퓨팅 시대(Era of spatial computing)’를 선언하며 디지털 패러다임 혁명적 변화를 예고(‘23.6)
 - 애플은 퍼스널 컴퓨팅(Personal Computing) 시대를 여는 맥(Mac), 모바일 컴퓨팅 시대를 선도하는 아이폰을 만들며 혁신을 주도
 - * 2022년 2,520만 대가 팔린 애플의 PC인 맥(Mac)은 퍼스널 컴퓨팅 시대를 주도
 - * 이후 모바일 컴퓨팅 시대를 이끈 아이폰의 누적 판매량은 2021년 20억대를 돌파했는데 아이폰은 출시 후 10억대 판매에 9년, 20억대 판매에 5년이 소요
 - 모바일 컴퓨팅을 잇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간컴퓨팅을 제시
 - * 2023년 6월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공간컴퓨팅 추진을 공식 선언하며 새로운 하드웨어 출시를 예고
- 이후, 공간컴퓨팅 시대의 첫 번째 공간 컴퓨터(Spatial Computer)인 비전 프로(Vision PRO)를 출시(‘24.2)
 - 공간 컴퓨터는 사용자가 현실 세계 및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면서 디지털 콘텐츠와 물리적 세계를 연결하는 혁신 기기
 - 비전 프로는 애플이 ’14년 공개한 애플워치 이후, 9년 만에 선보이는 공간컴퓨팅 시대를 이끌 공간 컴퓨터
 - * “과거 맥(Mac)이 개인 컴퓨터를, ‘아이폰’이 모바일 컴퓨팅의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비전 프로’를 통해선 공간컴퓨팅 시대를 선보이게 될 것” (팀쿡 애플 CEO)

• [그림 2] 애플의 공간 컴퓨터 비전 프로 •



자료: Apple

공간컴퓨팅의 파급효과: N.E.X.T

| ① 새로운 디지털 공간경제(New Digitalized Spatial Economy)

- 디지털 공간 경험 재창조(Reinvent)를 통해 경제 전반의 변화가 촉발
 -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가장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입력 체계인 사용자의 눈, 손, 음성을 통해 제어
 - 전통적인 화면 한계를 벗어나 가상 융합 공간 캔버스를 제공
 - 모든 경험이 사용자의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것과 같은 몰입감을 제공
 - 일하고, 소통하고, 노는 방식의 변화로 새로운 디지털 공간경제가 부상
 - * 업무 시 화면 제약이 없고, 통화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실물 크기로 구현되며 공간 음향도 적용되어 통화 상대방이 위치한 곳에서 음성이 들리는 듯한 경험을 제공
 - * 공간 컴퓨터를 통해 모든 공간이 100피트만큼 넓게 느껴지는 화면과 첨단 공간 음향 시스템을 갖춘 개인 영화관으로 탈바꿈
 - * 공간컴퓨팅을 통해 광범위한 몰입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게임 유형이 탄생

• [그림 3] 공간 컴퓨터로 일하고, 영화 보는 장면 •



자료: Apple

| ② 공간컴퓨팅과 AI 융합의 가속화(Expedited convergence of spatial computing and AI)

- 공간컴퓨팅과 AI 융합으로 공간 제작, 상호작용 방식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
 - 애플은 공간 컴퓨터인 비전 프로에서 구현될 디지털 아바타를 AI로 만드는 기술을 공개('23.12)
 - * 별도의 3D 스캐닝 장비 없이도 동영상 속 인물을 실제 인물과 같은 모습으로 빠르게 디지털 아바타로 만드는 생성AI 'HUGS(Human Gaussian Splits)'를 공개
 - AI로 디지털 공간, 객체를 제작하는 방식이 확산 중이며 이에 기반한 혁신 사업 모델이 공간 컴퓨터 운영체제 비전OS에 구동 전망
 - * 어도비는 5초 만에 2D 이미지를 3D로 바꿀 수 있는 AI를 선보였으며, Spline AI는 사용자가 프롬프트로 다양한 3D 객체를 만들고 실시간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
 - * 비전OS는 공간컴퓨팅을 위해 기초부터 새롭게 만든 최초의 운영체제로, 다양한 개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SDK를 출시('23.6)
 - * 2024년 1월, 애플 앱스토어에 약 186만개,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는 약 360만개의 앱이 존재하는 것처럼 AI기반의 혁신 디지털 공간 사업 모델이 등장 전망

| ③ 공간컴퓨팅 경험의 확대(eXtend spatial computing experience)

- 공간컴퓨터 구매자는 제한적이나 경험자는 확산되는 계기
 - 애플의 공간 컴퓨터 출시 전까지 스마트폰 사용 경험자 수 대비, HMD(Head Mount Display) 기반 디지털 공간 경험자는 2% 미만의 혁신가 그룹(Innovators)
 - * 세계 HMD 판매량은 약 2,100만대('22)로 스마트폰(12억대) 대비 1.8%에 불과
 - 비전프로의 공급물량 부족, 높은 가격으로 초기 구매자는 제한적
 - * 비전으로의 초기 년도 판매량은 약 50만대로 제한적
 - 다만, 애플 매장은 공간컴퓨팅 경험을 조기 수용자(Early Adopters), 조기 다수자(Early Majority)로 확산하는 계기를 제공
 - * '22년 기준 애플은 전 세계 521개의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며 '12년 분기당 방문자 수는 약 7,000만명으로 현재는 수억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

• [그림 4] 혁신수용 패턴 •



자료: Everett M. Roger(2003), Diffusion of Innovations, 5th ed.

| ④ 복합 경쟁 속으로(Toward complex competition)

- 단일 기기를 넘어 사물, 생태계 기반 경쟁으로 전개 전망

- 공간컴퓨팅은 디스플레이, TV, 노트북, 글래스, 새로운 폼팩터(form factor) 등 다양한 기기들과 융합되면서 진화
 - * 소니는 현실 3D 공간 이미지로 재현한 27인치 공간 디스플레이 프로토타입을 공개
 - * 사이트풀(Sightful)은 디스플레이 화면이 없이 AR글래스로 노트북을 사용하는 세계 최초의 증강현실(AR) 노트북을 공개
 - * 메타는 2024년 AI가 내재된 스마트 안경 출시를 통해 AI와 공간컴퓨팅이 결합 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전망

- 메타, 피코 등은 관련 기기를 지속출시해왔고 삼성, 구글, 퀄컴은 연합을 구축했으며, 소니, LG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도 경쟁에 가세

• [그림 5] Spatial Reality Display와 AR노트북 •



자료: 소니, 사이트풀

공간컴퓨팅 혁명을 준비하자

- 공간컴퓨팅 혁명이 가져올 변화 N.E.X.T에 대비

- 새로운 디지털 공간경제를 대비한 혁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 일하는 방식의 변화 방안을 모색 (New Digitalized Spatial Economy)
- 공간컴퓨팅과 AI 융합의 가속화 추세 모니터링 및 도입 방안 검토 (Expedited convergence of spatial computing and AI)
 - * 진화하는 생성AI 도구 모니터링, 생성AI를 활용한 디지털 공간, 객체, 아바타 제작 및 상호작용 혁신으로 혁신 BM 발굴
- 공간컴퓨팅 경험자 이용자 분석을 통해 경험가치 제고 방안을 모색 (eXtend spatial computing users)
- 복합 경쟁 속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태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사물과의 연동 방안도 고려 (Toward complex competition)

- 공간컴퓨팅이 풀어야 할 과제에 주목하며 변화의 속도를 가늠

- * 초기 제한된 공급량, 높은 가격, 무게, 배터리 지속 시간, 안전, 킬러 서비스의 등장 여부 등 공간컴퓨팅 확산 저해요소가 잔존 상태

- 공간컴퓨팅의 진화에 따른 미래 정책 이슈 탐색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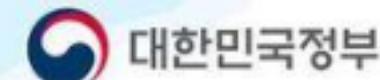
- 공간컴퓨팅 기기 및 플랫폼 경쟁의 가속화로 지배력 남용, 불공정행위, 딥페이크를 활용한 사기,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 다양한 문제가 진화된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
- 계류 중인 가상융합경제 진흥법('22.1월 기준)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유관 법률에서 관련 산업진흥, 부작용 최소화에 대한 입체적 논의가 필요

정책제언 | 정부동향 | 정책브리프 | 알기쉬운 정책

[지난호 보기](#)

[알기쉬운 정책](#) |





비행기, 렌터카 할인도 쟁기세요

항공

지방공항 도착편 **1만 5천 원 할인**

해당 노선 김포→울산/여수/사천/포항경주

판매 기간 2.29.~3.31. **사용 기간** 2.29.~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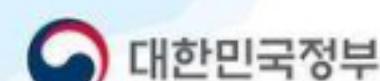
판매처 진에어 앱/웹

렌터카

수도권 **10%**, 비수도권 **20%**, 인구감소 지역 **50%** 할인

판매 기간 2.20.~3.31. **사용 기간** 3.1.~4.14.

판매처 카모아 앱 및 TMAP 앱



3만 원 숙박 할인 받으세요

비수도권 숙박상품 예약에 쓸 수 있는

3만 원 할인쿠폰을 드립니다.

5만 원이 넘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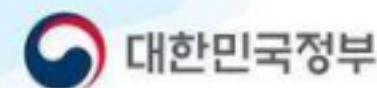
발급/사용기간 2.7.~4.14.

1차: 9만 장(발급·사용: 2.7.~25.)

2차: 11만 장(발급: 2.27.~3.31. / 사용: 2.27.~4.14.)

판매처

숙박기획전 누리집 ktostay.visitkorea.or.kr



3만 원에 당일 기차여행 떠나요

3만 원으로

교통,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해결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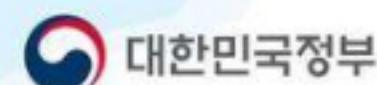
방문 지역 삼척, 고산, 하동, 안동 등 21개 지역

신청 기간 1차 2.20.~27. / 2차 2.28.~3.19.
3차 3.12.~17.

신청 방법 여행가는 달 누리집

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

'여기로 이벤트' 페이지에 접수



40% 할인 받고 여행상품 이용하세요

50여 곳 여행사가 제안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비용과 시간을 아껴보세요.

여행 상품 동해안 7번 국도 따라 1박 2일 여행,
제천 힐링 기차여행, 남도 미식여행 등

상세 정보 G마켓 여행상품 기획전 및
여행가는 달 누리집
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 참고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

지난호 보기

특별한 관광 정보 알려드립니다

2023 한국관광의 별 선정지 특별혜택

강진 : 오소스테이 전 객실 숙박요금 20% 할인

포항 : 스페이스워크 4컷 사진 무료촬영 이벤트 등

3월에만 둘러보는 숨은 관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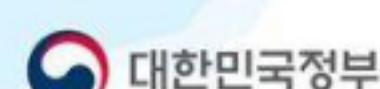
김포 :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조강 해님이' 야간개장

강원 : 태백산 하늘전망대 및 하늘탐방로 신규 개방 등

상세 정보

여행가는 달 누리집

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 참고



3월 혜택 챙기고 지역의 다채로운 매력을 즐겨보세요!

알기쉬운 정책 II

AI와 노동시장 - 일자의 양, 질 및 노사관계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NARS info
인포그래픽스 제58호

AI와 노동시장 - 일자의 양, 질 및 노사관계

『OECD Employment Outlook 2023』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환경노동팀
손혜원 입법조사관

2023년 7월, OECD는 '인공지능과 노동시장'을 주제로 하는 「OECD 고용전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글은 AI가 일자의 양적·질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에 미칠 영향, 균형 있는 고용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 등을 중심으로 OECD의 보고서를 소개하였다.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고용 관련 위험요소 내포



AI 기술의 발전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과 관련한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까지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음

- 부정 고속화 작업의 AI 대체, 자동화로 인한 저숙련 근로자 고용 감소 등
긍정 전문인력 수요 증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매칭프로세스의 효율성 제고

AI를 활용한 공공 고용서비스는 시간과 자원 절약 가능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매칭 프로세스의 효율과 품질을 증가시킬 수 있음

AI와 일자의 질

임금과 생산성 측면

OECD는 2022년에 실시한 계조암 금융업 부문 근로자·기업 대상의 실태조사 및 사례연구(이하 "OECD AI 조사")는 임금과 생산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

AI 기술을 갖춘 근로자는 고임금을 받음
AI의 사업 적용과 관련한 관리 직종 근로자의 수요가 높음

AI를 사용하더라도 특별한 AI 기술이 없는 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음

AI와 생산성 사이에 긍정적 인과관계는
아직 확실하지 않음

생성형 AI 응용 프로그램 활용이 저숙련 직원의 성과를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1/4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NARS info
인포그래픽스 제58호

직업 만족도, 정신적·신체적 건강

OECD 보고서는 AI의 적정 도입이 근로자의 직업 만족도, 정신적·신체적 건강 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활용 방식이나 근로자 그룹의 특성에 따라 반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긍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 ❖ 자동화에 따른 업무 만족도와 작업장 안전성 향상
- ❖ 관리 업무의 부분 자동화에 따른 효율성 제고
- ❖ 작업구성 변경을 통한 업무품질 및 자율성 제고
- ❖ 자율성 및 생산성 측면의 긍정적 영향

근로자 그룹의 특성에 따른 영향

- ❖ 업무속도가 빨라지고 쉬운 작업이 자동화되면서 더 빨리 고강도 작업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음
- ❖ 작업자의 통제력도 같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더 큰 스트레스로 이어지지는 않음

| 관리직, AI 시스템 개발·유지관리, 고학력 근로자 |

AI 도입 후 작업 만족도와 건강이 개선됐다고 답한 경향이 커짐

| 알고리즘 관리 대상 근로자나 AI를 사용하는 근로자 |

AI와 관련 업무품질에 대해 가장 뛰 긍정적인 결과를 답함



인사 및 작업 관리

심신 및 안전에 대한 우려

AI 알고리즘의 광범위한 모니터링과 데이터 기반 평가는 근로자 심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안전을 저하시킬 수 있음

자율성, 통제력 저하 및 소외감 조성

- ❖ AI를 통한 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가 극단적이거나 완전 자동화되면 근로자 자율성과 통제력 감소 및 소외감을 조성할 수 있음
- ❖ AI 기반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설명이 부족하거나 알고리즘 관리의 대상이 될 경우, 근로자의 자율성이 감소할 수 있음

개인정보 침해 등 우려

AI가 근로자나 업무방식에 관해 과도하게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나 사이버보안 침해 및 근로자 복지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음

2/4



AI의 포용성

포용성 향상

AI는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장애인 및 저숙련 근로자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But,

기초적 디지털 기술이나 특정 언어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포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공정성과 편견

AI 시스템이 설계·구현 단계부터 신중하게 고안된 경우, 직장에서 편견을 줄이고 공정성 강화 가능

If not

- ❖ AI 시스템이 부족할 경우 편견을 증폭·체계화시킬 수 있음
- ❖ AI 시스템을 통한 차별은 감지가 어려우므로 법적 보호의 테두리를 벗어날 위험이 있음

AI 시대의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

OECD 보고서는 AI 기술이 사회적 피드백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듬과 같이 분석하고 있음

01 10 001 011 110 1
10 11 011 000 101
1 0 11 000 101 100



- AI 전환에 따른 플랫폼 경제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는 사회적 파트너의 대표성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음
- AI로 인한 정보 비대칭과 권력 불균형 심화는 근로자의 교섭 기반을 악화시킬 수 있음
- 노조 활동에 대한 AI 기반 모니터링 등이 악용되어 사회적 대화를 제한·방해할 수 있음
- 고용 관계의 권리 불균형으로 근로자가 AI와의 상호작용이나 개인 데이터 활용 등의 자체를 거부하지 못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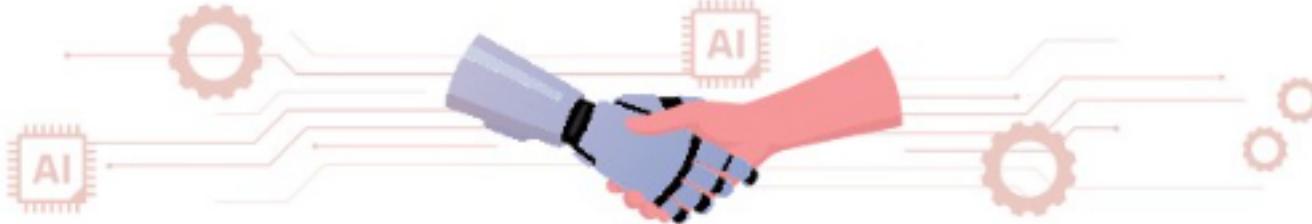
OECD 보고서는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이

- AI 기술 도입 촉진, 근로자 재교육 요구를 통해
- 기업의 AI 활용, 경쟁력 강화, 기술 변화의 공정한 대응을 조력하고,
- 근로환경 향상과 근로자 권리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3/4



AI 전환에 대한 사회적 파트너의 현재 활동 진단 및 시사점



사회적 파트너의 입장

- 디지털과 AI 기술이 업무를 어떻게 촉진하고, AI 관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를 검토하기 시작
- 대표성 제고, 조직화 지원,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개선을 위해 디지털 도구를 더 잘 활용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함

홍보 및 교육

- 디지털 도구, 로봇 공학 및 데이터 관련 역량의 필요성, AI숙련 필요성과 교육 요구사항을 강조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
- 신뢰할 수 있는 AI 사용, 근로자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호, 교육 요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경고

공공 정책 보완

- 인간의 감독 없이 자동화된 의사결정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와 같은 새로운 권리를 옹호하고 AI로 인한 위험을 규제하는 정책적 대응을 요구

정부 지원 필요성

- OECD는 사회적 파트너의 AI 관련 전문성 부족을 AI 전환의 주요 지원과제로 보고 있음
- 직장과 기업 차원에서 사회적 파트너가 AI관련 전문지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 전문가 모집이나 컨설팅 등의 정부 지원 필요성 제기

근로자의 직업 만족도 향상, 편향성 완화와 포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AI 지원 촉진 및 규제 정책을 면밀하게 설계

AI 최신 동향의 모니터링과 국제적 협력을 지속

사회적 파트너와 이해 관계자가 AI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 환경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촉진·지원

AI 전환의 성공적 견인과 근로자 적응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정책적으로 지원

NARS info는 입법 및 정책 현안을 조사·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의 핵심 내용을 인포그래픽으로 암기 쉽게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원문 자료 | 손혜원, 「AI와 노동시장-일자리의 양, 질 및 노사관계」OECD Employment Outlook 2023,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외국 입법·정책 분석』, 제46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 12. 27.을 인포그래픽으로 구성함

발간등록번호 | 31-9735043-001896-14 e-ISSN | 2799-3027 Copyright@NARS



제46호 | 발행일: 2024년 1월 31일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박상철 | 02-6788-4524 | www.nars.go.kr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

4/4